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 일 시 : 2024년 2월 1일(목), 16:40-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층 305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은행

프 로 그 램

특별세션 II :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 일시 : 2월 1일(목), 16:40-18:00
- 장소 :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3층 305호
-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은행

사 회 : 객노선(서강대)

환 영 사 : 이재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발 표 1 : 조태형(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논 평 1 : 정현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 표 2 : 정종우(한국은행 경제연구원)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논 평 2 : 양희승(연세대)

발 표 3 :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논 평 3 : 문윤상(KDI)

목 차

| 주제발표 |

발표 1 :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1
조태형(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표 2 :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27
정종우(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표 3 :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45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발 표 1]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2024. 2. 1.

조 태 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 조태형

1

목차

- I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 II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 III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IV 미래 성장전략
- V 결론

2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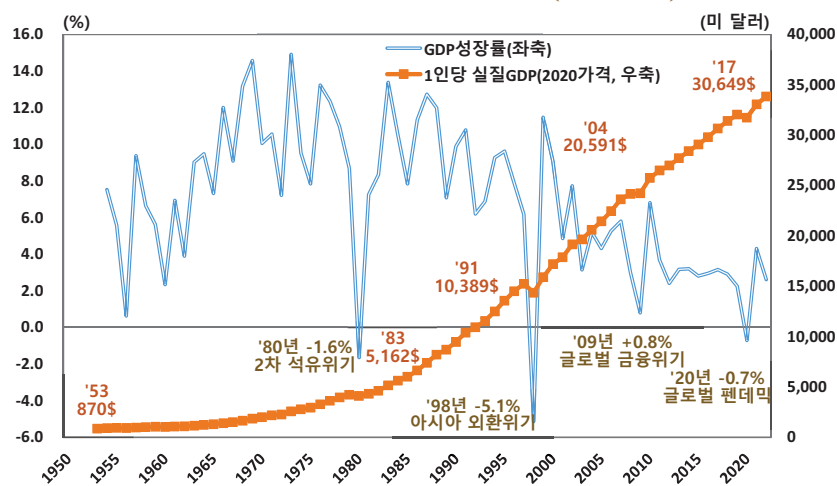
3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 ◆ 한국경제는 1953~2022년 중 연평균 6.9% 성장, 1인당 명목GDP는 같은 기간 66달러 → 32,410달러로 증가
 - 한국의 사례는 경제성장의 기적에 해당하며 인류문화의 지적 유산의 하나이다

한국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시장환율)



자료: 오렌지색 수치는 1인당 실질GDP (2020년 환율 및 가격)

4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 한국은 2023년 현재 '30-50'클럽 7개국 중에 속함

- ❖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지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 구매력평가(PPP) 기준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56,709 달러) 프랑스 영국과 비슷하고, 일본,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

'30-50'클럽 7개국의 인구와 소득

	인구 (백만명)	1인당GDP (시장환율)	1인당GDP (PPP환율)
미국	335.143	80,412	80,412
독일	83.861	52,824	66,038
영국	68.122	48,913	56,836
프랑스	65.832	46,315	58,765
이탈리아	58.851	37,146	54,259
일본	124.621	33,950	52,120
한국	51.565	33,147	56,709

자료: IMF (2023.10)

5



한국경제의 성공 스토리

- ◆ 그런데 한국경제의 과거 성공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퇴조하고 있어 미래의 성장을 크게 우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
 - 노동투입의 마이너스 전환 및 감소폭 확대
 - 자본투입 큰 폭 둔화세
 - 총요소생산성(TFP) 향방 불확실성

⇒ 이에 본고는 1970년 이후 50여년 경제성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어서 2050년까지의 미래를 전망한 다음
한국경제의 성장 유지 또는 감속 지연을 위한 전략을 제시

6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7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 방법론: 생산함수 접근법, 성장회계 방식

- $Y = A * K^{\alpha} * (L * H)^{(1-\alpha)}$
- $\ln Y = \ln A + \alpha * \ln K + (1-\alpha) * (\ln L + \ln H)$

◆ 미래 성장률 = 자본투입(K) 기여 + 총노동시간(L) 기여 + 노동구성(H) 기여 + TFP 증가율

- 자본투입 증가율=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 노동투입 증가율=노동구성 변화를 고려한 총근로시간 증가율
 - 연간총근로시간 = 취업자수 * 연평균근로시간
 - 노동구성 =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을 별도로 측정. 평균교육연수에 연동
- TFP 증가율은 자본투입 기여도에 연동: 한국과 미국의 과거 경험 적용

8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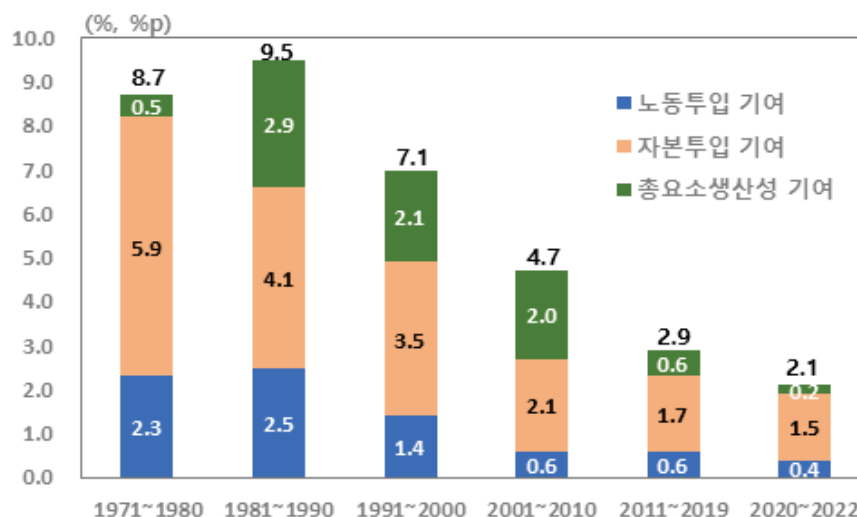
[분석결과]

- ◆ 1971~2022년 중 한국의 총부가가치는 연평균 6.4% 성장
 - 이 중 자본투입이 3.4%p로 전체 성장의 과반(53.1%)을 기여
 - 노동투입은 1.4%p(22.6%), TFP는 1.6%p(24.3%)를 기여
- ◆ 시기별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연간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하여 2010년대(2011~2019년)에는 연간 2.9%로 둔화
 - 자본투입 기여도: 1970년대 5.9%p → 1990년대 3.5%p → 2000년대 2.1%p → 2010년대 이후 1.5 ~ 1.7%p
 - 노동투입 기여도: 1970~80년대 2.3 ~ 2.5%p → 2000년대 이후 0.4~0.6%p
 - TFP 기여도: 1980년대 2.9%p → 1990~2000년대 2.0~2.1%p → 2010년대 0.6%

9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10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지난 50년간 경제성장 요인별 기여도 및 기여율 (로그변수)

(%, %p)

	GVA 성장 (1=2+5)	노동소득 비중 (총액)	Input factor effects										TFP 향상 효과 (5)	
			총투입 기여 (2=3+4)	노동투입 기여						자본투입 기여				
				노동투입 기여 (3=31+32)	노동구성 (31)	총근로시 간 (32=321~ 324)	평균근로 시간 (321)	고용률 (322)	15세 이상 인구비중 (323)	총인구 증가 (324)	자본투입 기여 (4=41~43)	건설자산 (41)		설비자산 (42)

[성장 기여도]

1971~2022	6.4	61.6	4.8	1.4	0.7	0.8	-0.5	0.1	0.6	0.6	3.4	1.3	1.7	0.4	1.6
1971~1980	8.7	63.3	8.3	2.3	0.3	2.1	-0.1	0.1	1.1	1.1	5.9	2.1	3.6	0.2	0.5
1981~1990	9.5	64.4	6.6	2.5	1.1	1.4	-0.4	0.3	0.7	0.8	4.1	1.5	2.3	0.3	2.9
1991~2000	7.1	63.1	4.9	1.4	0.8	0.6	-0.4	0.0	0.4	0.6	3.5	1.4	1.7	0.5	2.1
2001~2010	4.7	59.3	2.7	0.6	0.8	-0.1	-0.9	0.0	0.4	0.3	2.1	0.9	0.7	0.6	2.0
2011~2019	2.9	57.5	2.3	0.6	0.4	0.2	-0.6	0.2	0.6	0.3	1.7	0.7	0.6	0.5	0.6
2020~2022	2.1	60.4	1.9	0.4	0.3	0.1	-0.6	0.4	0.4	-0.1	1.5	0.4	0.6	0.5	0.2

[성장 기여율]

1971~2022	100.0		75.7	22.6	10.4	12.2	-7.8	2.1	9.0	8.9	53.1	19.8	26.7	6.6	24.3
1971~1980	100.0		94.7	26.9	3.0	23.9	-1.5	1.0	12.2	12.2	67.8	24.2	40.9	2.7	5.3
1981~1990	100.0		69.1	26.0	11.8	14.2	-4.4	2.8	7.8	8.0	43.1	15.6	23.9	3.6	30.9
1991~2000	100.0		69.8	19.7	11.6	8.1	-6.0	-0.1	6.0	8.3	50.1	19.2	24.3	6.6	30.2
2001~2010	100.0		58.1	13.7	16.7	-3.1	-19.1	0.8	8.6	6.7	44.4	18.3	14.0	12.1	41.9
2011~2019	100.0		79.5	20.2	14.2	6.0	-20.5	7.6	9.4	9.6	59.3	24.6	19.1	15.6	20.5
2020~2022	100.0		92.5	19.3	16.1	3.1	-30.2	17.2	18.7	-2.5	73.3	20.7	26.3	26.2	7.5

11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 ◆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
-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

시기별 성장률 및 요소 기여도 증감

	GVA 성장률	성장 기여도 (%p)			증감 (%p)			
		노동	자본	TFP	성장률	노동	자본	TFP
1971~1980	8.7	2.3	5.9	0.5				
1981~1990	9.5	2.5	4.1	2.9	0.8	0.1	-1.8	2.5
1991~2000	7.1	1.4	3.5	2.1	-2.4	-1.1	-0.6	-0.8
2001~2010	4.7	0.6	2.1	2.0	-2.4	-0.8	-1.4	-0.2
2011~2019	2.9	0.6	1.7	0.6	-1.8	-0.1	-0.4	-1.4
2020~2022	2.1	0.4	1.5	0.2	-0.8	-0.2	-0.2	-0.4

12



지난 50여년의 경제성장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하락 관련 설명

- 생산성본부 (2023)
: 주력제조업의 생산성 하락,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 정선영·이솔빈 (2021)
: 투자, 수출 등 수요 부진, 주력 제조업 부진 및 저생산성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 기업의 역동성 약화, 인구 고령화와 무형경제로의 전환
- Goldin et al.(2022)
: 200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는 고정투자 감소, 무형자산의 파급효과 축소, 세계교역 둔화, 기업동학의 약화 및 기업집중도 강화, 배분 효율성 저하, 측정오차 등에 기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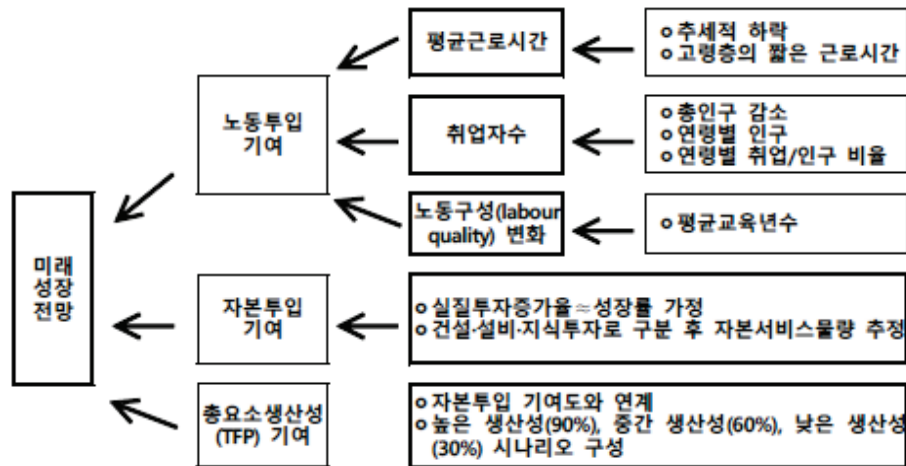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14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방법론: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각각의 기여도 합산]



주: 노동소득분배율은 최근 추이를 고려하여 60%로 가정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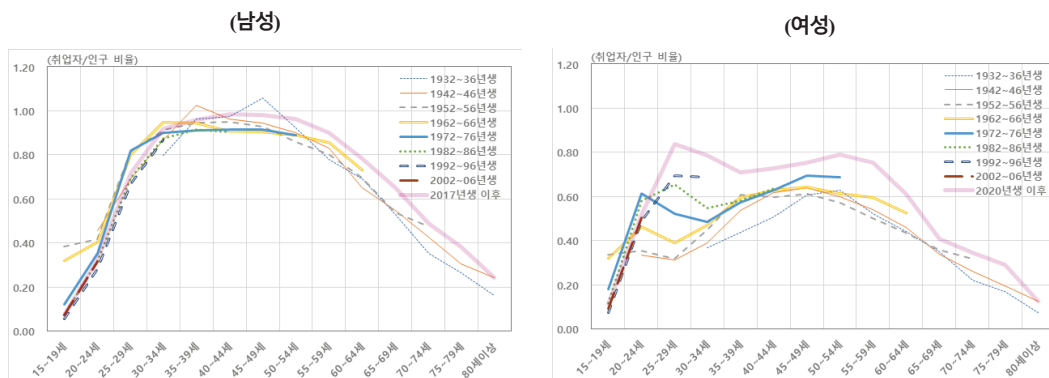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① 노동 투입 전망 전제

◆ 취업자수: 향후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률이 더 높아질 전망

- 2032년까지 각 1세 기준 취업-인구비율이 지난 6년중(2017~22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
- 다만 20~64세 여성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까지의 증가 추세가 2035년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가정

출생시기별 연령별 취업자/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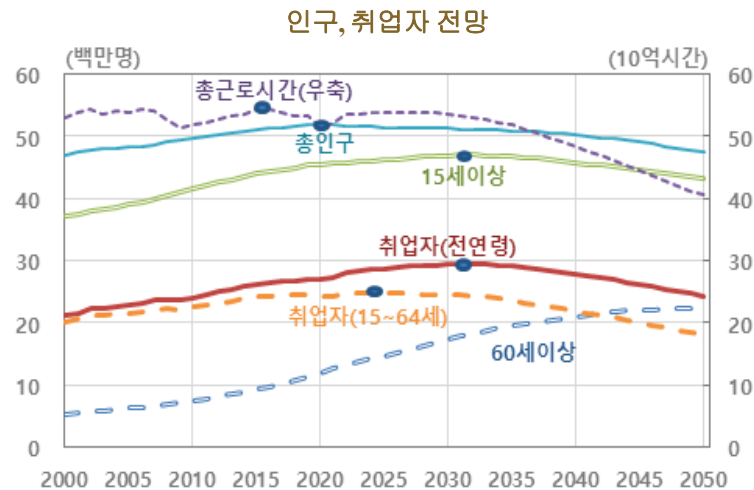


16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현재 중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해 보면, **2032년경 취업자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
-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활동 적극성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17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근로시간: 2000년 이후 하락 추세 반영; 고령화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고려
- 2000년 2505시간 → 2022년 1902시간. 이러한 추세적 하락이 미래에도 지속 가정
- 또한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에 따라 근로시간이 추가적으로 하락

성별 연령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남자)								
2017	30	43	47	47	46	44	37	25
2019	28	41	45	45	45	43	36	25
2022	25	39	43	43	42	40	34	22
(여자)								
2017	26	40	40	41	43	39	27	22
2019	21	37	39	39	41	37	25	18
2022	19	35	38	37	38	35	2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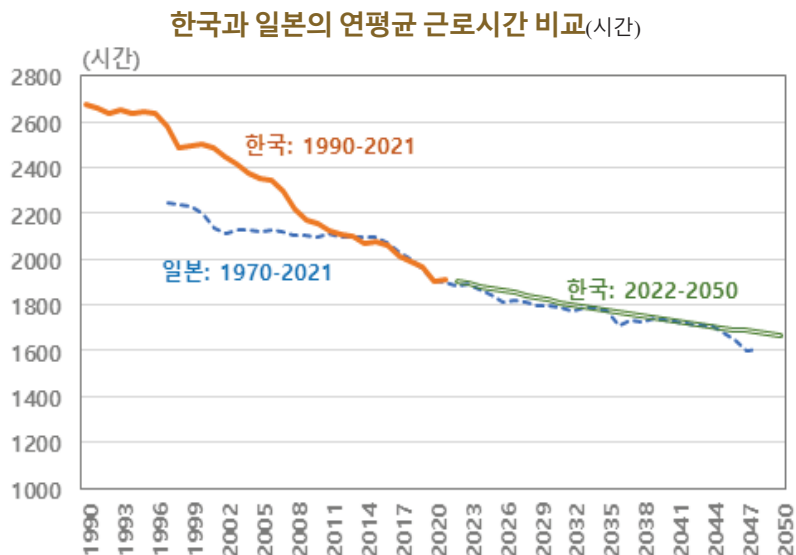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한 것임.

18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본고 추정 평균근로시간 : 2022년 1902시간 → 2050년 1666시간
 - 주요 비교군: OECD 평균 – 1752시간 (2022), 독일 – 1341시간 (2022)
 - 일본 – 1905시간 (1993) → 1607시간 (2022)



19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노동구성: 노동구성(LQ) 변화와 평균교육연수(EDU) 간의 회귀식을 이용
 - $\widehat{LQ} = 0.596 \times EDU + 0.4105$
 - 평균교육연수가 1% 증가할 경우 노동구성 변화는 대체로 0.6% 정도 증가
 - 평균교육연수는 2020년 현재 12.7년에서 2050년경 13.7년으로 증가 예상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연령별 취업자의 평균교육연수

(years)					
15세 이상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12.7	10.8	14.2	14.8	14.1	11.1

주: 인구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추정

20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② 자본투입= 자본서비스 물량

- ◆ 자본투입은 분야별 미래 투자기회를 예상하여 개별 자본재별 투자를 전망하고 스톡(K)-플로(I) 항등식을 이용하여 각 자산별 스톡을 추정하고 다음 자본 사용자비용을 결합하여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을 계산

• K-I 항등식: $K_t = (1 - \delta)K_{t-1} + (1 - \delta/2)I_t$,

단, δ = 건설자산 2.8%, 설비자산 14.3%, 지식재산생산물 17.4%로 가정

- ◆ 고정자산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실제 전망에서는 t년 고정투자 증가율이 t-2~t-7년중 평균 GDP성장률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우리나라 주요 거시지표의 실질 변동률 비교

(%)

	GDP	고정투자 증가율	순자산 증가율	자본서비스 증가율
2011~2021	2.7	2.8	3.4	4.1
2017~2021	2.4	2.4	3.4	4.1

자료: 한국은행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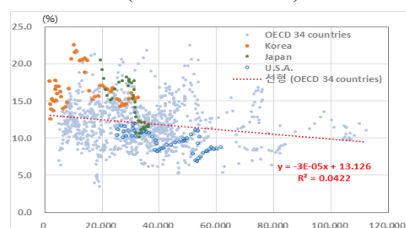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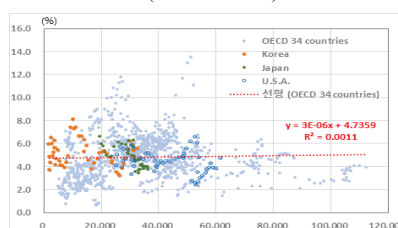
- ◆ 한국의 고정자본스톡/GDP 비율은 OECD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여온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향후 둔화될 가능성

1인당 소득과 자산별 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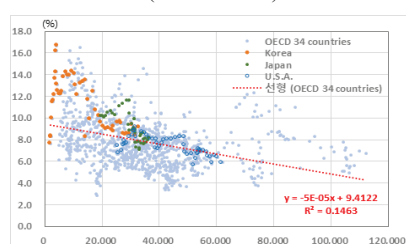
(건설자산 투자/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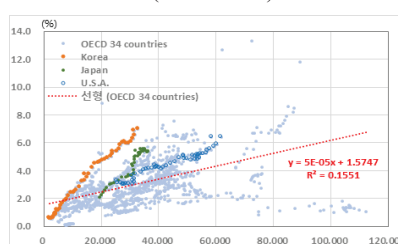
(주택투자/GDP)



(설비투자/GDP)



(IPP 투자/GDP)



자료: OECD stat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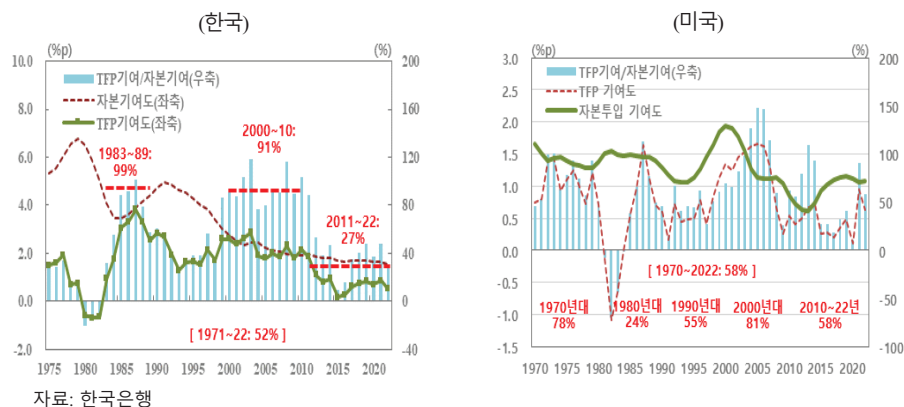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③ TFP 증가율

- ◆ TFP 증가율이 자본 투입 성장 기여도의 30%(낮은 생산성), 60%(중간 생산성), 90%(높은 생산성)가 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 자본투입 기여도와 TFP 기여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참고: 1971~2022년중 TFP 기여도는 자본투입 기여도의 52%, 80년대 후반 및 2000년대에는 90%를 상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22년중에는 27%.

TFP 기여도와 자본투입 기여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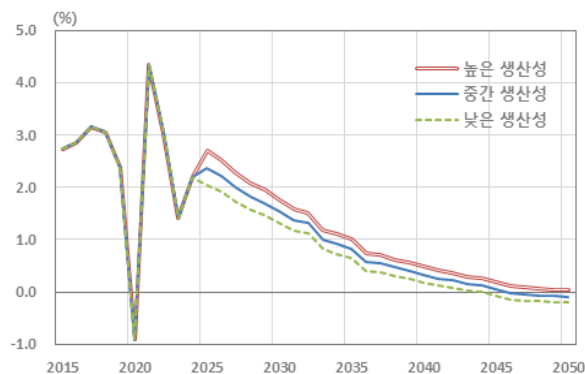
23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중위 인구추계 및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를 적용한 추계 결과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예상됨
-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
-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
-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중위추계 인구에 근거한 한국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



24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우리나라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중위 인구추계, 수준변수)

	GDP 성장률 (%)	성장 기여도 (%p)			노동 소득 분배율(%)	요소별 성장률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1인당 GDP(기말, USD)
		노동 투입	자본 투입	TFP 향상		노동 투입	노동 구성	총 근로시 간	자본 투입		
[높은 생산성, 중위추계 인구]											
2011~2015	3.0	1.1	1.7	0.2	57.1	1.9	0.9	1.0	4.1	1.1	30,659
2016~2020	2.1	-0.3	1.7	0.7	58.6	-0.5	0.7	-1.2	4.1	0.7	33,472
2021~2025	2.7	0.9	1.4	0.4	60.1	1.6	0.6	1.0	3.4	0.3	38,581
2026~2030	2.1	0.5	0.9	0.8	60.0	0.8	0.9	-0.1	2.2	0.3	43,049
2031~2035	1.3	0.1	0.6	0.6	60.0	0.1	0.8	-0.7	1.6	-0.1	46,173
2036~2040	0.6	-0.4	0.5	0.5	60.0	-0.6	0.8	-1.4	1.3	-0.4	48,265
2041~2045	0.3	-0.6	0.4	0.4	60.0	-0.9	0.7	-1.6	1.1	-0.5	50,142
2046~2050	0.1	-0.7	0.4	0.4	60.0	-1.2	0.7	-1.9	1.0	-0.6	52,072
[중간 생산성, 중위추계 인구]											
2021~2025	2.7	0.9	1.4	0.3	60.1	1.6	0.6	1.0	3.4	0.3	38,456
2026~2030	1.9	0.5	0.9	0.5	60.0	0.8	0.9	-0.1	2.2	0.3	42,362
2031~2035	1.1	0.1	0.6	0.4	60.0	0.1	0.8	-0.7	1.6	-0.1	45,005
2036~2040	0.5	-0.4	0.5	0.3	60.0	-0.6	0.8	-1.4	1.3	-0.4	46,680
2041~2045	0.2	-0.6	0.4	0.3	60.0	-0.9	0.7	-1.6	1.1	-0.5	48,171
2046~2050	-0.1	-0.7	0.4	0.2	60.0	-1.2	0.7	-1.9	1.0	-0.6	49,725
[낮은 생산성, 중위추계 인구]											
2021~2025	2.6	0.9	1.4	0.3	60.1	1.6	0.6	1.0	3.4	0.3	38,332
2026~2030	1.6	0.5	0.9	0.3	60.0	0.8	0.9	-0.1	2.2	0.3	41,687
2031~2035	0.9	0.1	0.6	0.2	60.0	0.1	0.8	-0.7	1.6	-0.1	43,867
2036~2040	0.3	-0.4	0.5	0.2	60.0	-0.6	0.8	-1.4	1.3	-0.4	45,148
2041~2045	0.0	-0.6	0.4	0.1	60.0	-0.9	0.7	-1.6	1.1	-0.5	46,279
2046~2050	-0.2	-0.7	0.4	0.1	60.0	-1.2	0.7	-1.9	1.0	-0.6	47,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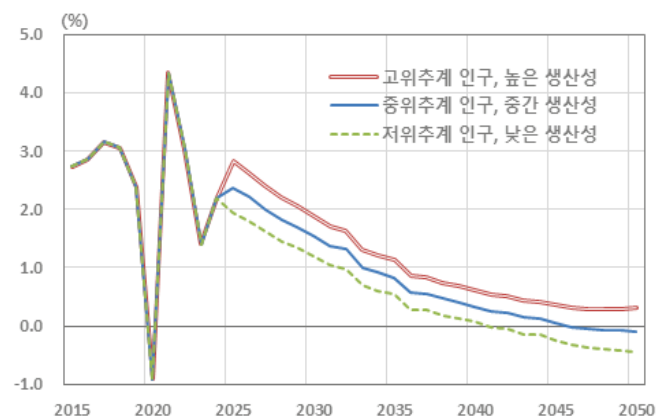
25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생산성 뿐 아니라 추계인구에 대한 가정도 변동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성장률이 아래와 같이 추계됨
- 높은 생산성-고위 추계 인구: 2020년대 2.5%, 2030년대 1.1%, 2040년대 0.4%
- 중간 생산성-중위 추계 인구: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
- 낮은 생산성-저위 추계 인구: 2020년대 2.0%, 2030년대 0.5%, 2040년대 -0.3%

추계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변동시킨 경우 경제성장 전망



26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우리나라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인구추계 변동, 수준변수)

	GDP 성장률 (%)	성장 기여도 (%p)			노동 소득 분배율(%)	요소별 성장률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1인당 GDP (기말, USD)
		노동 투입	자본 투입	TFP 향상		노동 투입	노동 구성	총 근로시간	자본 투입		
[높은 생산성, 고위추계 인구]											
2011~2015	3.0	1.1	1.7	0.2	57.1	1.9	0.9	1.0	4.1	1.1	30,659
2016~2020	2.1	-0.3	1.7	0.7	58.6	-0.5	0.7	-1.2	4.1	0.7	33,472
2021~2025	2.8	1.0	1.4	0.4	60.1	1.7	0.6	1.1	3.4	0.4	38,284
2026~2030	2.2	0.6	0.9	0.8	60.0	1.0	0.9	0.1	2.2	0.5	42,321
2031~2035	1.4	0.2	0.6	0.6	60.0	0.3	0.8	-0.5	1.6	0.1	44,991
2036~2040	0.7	-0.2	0.5	0.5	60.0	-0.4	0.8	-1.2	1.3	-0.1	46,629
2041~2045	0.4	-0.4	0.4	0.4	60.0	-0.7	0.7	-1.4	1.1	-0.2	48,086
2046~2050	0.3	-0.5	0.4	0.4	60.0	-0.8	0.7	-1.5	1.0	-0.3	49,744
[중간 생산성, 중위추계 인구]											
2021~2025	2.7	0.9	1.4	0.3	60.1	1.6	0.6	1.0	3.4	0.3	38,456
2026~2030	1.9	0.5	0.9	0.5	60.0	0.8	0.9	-0.1	2.2	0.3	42,362
2031~2035	1.1	0.1	0.6	0.4	60.0	0.1	0.8	-0.7	1.6	-0.1	45,005
2036~2040	0.5	-0.4	0.5	0.3	60.0	-0.6	0.8	-1.4	1.3	-0.4	46,680
2041~2045	0.2	-0.6	0.4	0.3	60.0	-0.9	0.7	-1.6	1.1	-0.5	48,171
2046~2050	-0.1	-0.7	0.4	0.2	60.0	-1.2	0.7	-1.9	1.0	-0.6	49,725
[낮은 생산성, 저위추계 인구]											
2021~2025	2.6	0.9	1.4	0.3	60.1	1.5	0.6	0.9	3.4	0.2	38,550
2026~2030	1.5	0.4	0.9	0.3	60.0	0.6	0.9	-0.3	2.2	0.1	42,269
2031~2035	0.8	-0.1	0.6	0.2	60.0	-0.1	0.8	-0.9	1.6	-0.3	44,927
2036~2040	0.2	-0.5	0.5	0.2	60.0	-0.8	0.8	-1.6	1.3	-0.7	46,749
2041~2045	-0.1	-0.7	0.4	0.1	60.0	-1.2	0.7	-1.9	1.1	-0.9	48,388
2046~2050	-0.4	-0.9	0.4	0.1	60.0	-1.5	0.7	-2.2	1.0	-1.0	49,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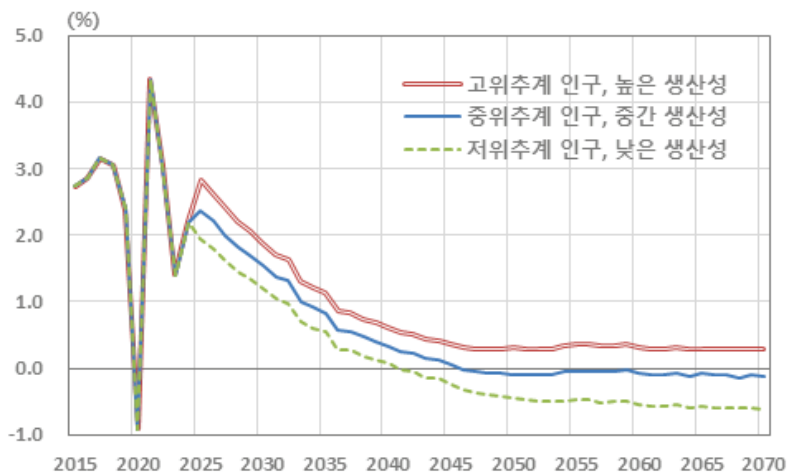
27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 시계를 더 멀리하면,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2040~50년경 이후 일정한 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

추계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변동시킨 경우 경제성장 전망



28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

◆ 여타 전망과 차이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가정의 차이**에 기인

- TFP 증가율은 독립변수인가 자본 기여도와 연관된 변수인가?
- 인구 감소 시기 TFP 증가율은 인구 증가 시기와 다를 수 있는가?

주요 연구와 중장기 성장률 전망 비교

기간	Cho (2023.12)	IMF (2023.4)	Goldman Sachs (2022.12)	KDI (2022.11)	OECD (2021.10)
2020-28	2.0 (2.2)	2.1	2.0	2.2	2.3
2020-29	2.0 (2.2)				
2021-30	2.3 (2.5)				
2030-39	0.9 (1.2)		1.4	1.3	0.8
2031-40	0.8 (1.1)				
2040-49	0.1 (0.4)		0.8	0.7	0.1
2041-50	0.1 (0.4)				

주: Cho(2023.12)는 중위 인구추계, 중간 생산성 기준. ()내는 고위 인구추계 및 높은 생산성 적용시임.

29



미래 성장 전략

30

- ◆ 우리 경제의 성장을 하락을 늦추기 위한 전략은, **(1) 높은 생산성 유지**
 - Isaksson (2007): 1) 지식(knowledge)의 창출, 전달 및 흡수 2) 생산요소의 공급 및 효율적 배분 3) 제도, 교역증대(integration) 및 지리적 요소(invariants) 4) 경쟁여건, 불평등 등 사회적 차원 및 환경
 - Bailliu et al. (2017): 외국인직접투자(실질FDI 스톡), 경제개방도(실질수입), R&D지출,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 ◆ **(2) 노동 투입 감소 및 자본 투입 하락 저지**
 - 노동 투입: 노동투입의 양적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교육훈련, 경험기반 학습 등 질적 향상 도모
 - 교육과정 전반의 혁신과 유연성 제고 등 대학교육의 선진화
 - 자본 투입: 투자 구성의 변화가 중요 (건설자산, 기계장비 → 무형 자산)
 -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의 부단한 업그레이드, 사회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에 주안점, 무형자산 축적에 초점을 둔 개혁

항목	주요 과제	세부 과제
TFP 향상	①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탈탄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부단한 전환 및 4차산업혁명·디지털화에 선도적 대응 - 상품/공정 혁신을 통한 수요창출 및 생산효율 증대 - 기업 창업/퇴출 프로세스 기능 활성화 - 탈탄소·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활용
	③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재정지출 확대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 ○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직간접투자의 효과적 운용 및 신용공급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자본 투입	②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 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구성 변화 및 적정투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경제에 대응한 무형자산 축적 ○ 인구감소에 전방위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출산 대책,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민정책, 우호국과 경제통합 고려 등 ○ 인구감소 불가피시 「선택과 집중」 전략
노동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문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digital)·탈탄소(green) 전환]

- ◆ 한국경제가 농림어업→경공업→중공업→ICT산업으로 끊임없이 변모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꾸준한 변신이 필요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2
농림어업	48.6	39.3	29.0	16.0	8.4	4.3	2.4	1.8
광공업	9.0	14.7	20.7	26.0	28.4	29.6	30.3	28.1
전기가스수도업	0.4	0.6	1.4	2.3	2.2	2.9	2.1	0.9
건설업	2.2	3.3	5.1	7.7	9.6	6.1	5.0	5.7
서비스업	39.8	42.0	43.8	48.0	51.4	57.2	60.1	63.5
민간서비스 ¹⁾	30.5	27.6	32.8	36.4	39.3	44.4	44.6	45.6
공공서비스 ¹⁾	9.3	14.4	11.0	11.7	12.1	12.8	15.5	17.9
제조업 ²⁾	7.9	12.3	19.0	24.7	27.7	29.3	30.2	28.0
경공업 ³⁾	6.2	9.3	11.5	10.3	8.0	6.0	4.0	3.3
석유화학	0.5	0.8	2.7	5.0	4.3	5.2	5.6	5.8
(비)금속가공 ⁴⁾	0.5	1.2	1.6	3.8	5.3	4.8	5.6	5.2
전기전자	0.1	0.1	1.1	3.3	5.3	8.1	8.8	8.9
기계장비	0.3	0.5	0.6	1.1	1.9	2.3	2.4	2.4
운송장비	0.4	0.4	1.6	1.2	2.8	3.0	3.8	2.2
광업	1.1	2.4	1.6	1.3	0.7	0.3	0.2	0.1

Notes: 1) 공공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교육, 의료·보건복지를 포함하며, 나머지는 민간서비스업으로 분류.

2) 1953년과 1960년의 제조업 하위산업의 경우 1975년 기준 자료를 현행과 같이 분류한 것임

3) 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출판, 기타제조업을 포함

4)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을 포함 Source: Bank of Korea. Author's own classification for older dat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digital)·탈탄소(green) 전환]

◆ 향후 산업변화의 큰 맥락(mega changes)

-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 물리적 기반으로 역할
- 코로나를 거치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각국의 관광 분야 활성화 예상
- 에너지 전환과 함께 전기차, 2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등의 수요도 꾸준
-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함께 군수산업 및 자원개발 분야의 중요성 증대. 항공, 우주 분야로의 진출이 본격화
- 기후대응과 함께 환경관련산업도 더욱 중요
- 인구의 고령화 가속과 함께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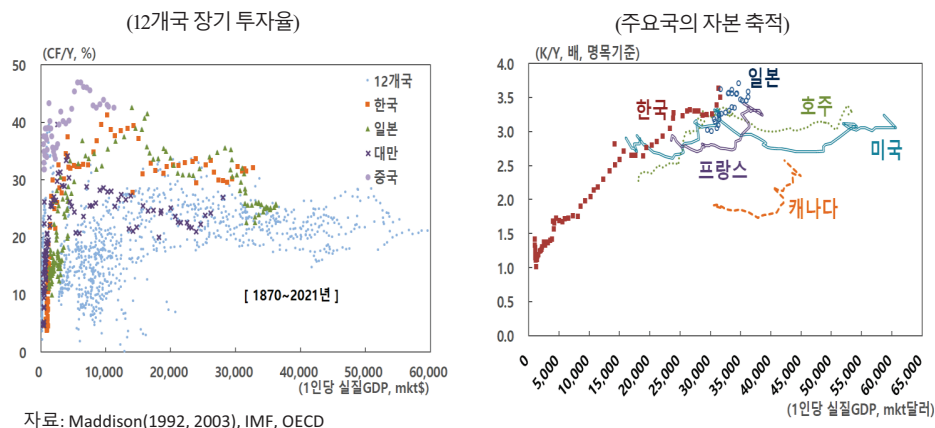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빚은 데다 미국이 첨단산업분야 및 희귀광물분야를 중심으로 우호국을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 향후 미중간의 경쟁 양상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에너지 등 자원수급의 다원화 추세는 불가피해 보임
- ◆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자원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외교·군사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세계 곳곳에 장기 안정적인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를 확립하고자 노력
 - 그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전략적 개념을 결합하고 원조 대상국의 선정 및 그 나라의 경제개발 성공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이들 국가와의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35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구성 변화 및 적정투자 유지]

- ◆ 한국의 고정자산/GDP 비율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 과잉투자 우려 상황
 - 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려면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는 설비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구성을 변경할 필요

주요국의 장기 투자율 및 자본축적



36

[인구감소에 전방위적 대응]

- ◆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과 함께 여성 및 고령층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 정부의 관련예산 부문에 대한 재점검 및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출구조 개선
 -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전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 등 필요
- ◆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산업의 「선택과 집중」의 기로
 - 중위추계인구 기준, 2070년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는 1711만명(통계청 '23.12.14). 이는 2022년 대만의 같은 연령대 인구 1689만명과 유사

37

[지식축적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 지식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추동력이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일차적 원천
 - 정부, 연구소, 기업, 대학을 아울러 연구개발 역량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전공분야의 탄력적인 전환, 평생교육 일상화 등 고교육의 질적향상에 집중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을 늘릴 필요

주요국의 기술 수준 비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기술수준 (%)	미국	76.6	78.7	100.0	100.0	100.0	100.0	100.0
	EU	72.9	75.0	94.5	95.5	94.4	94.8	95.6
	일본	70.4	73.0	93.4	93.1	92.7	87.9	87.3
	한국	56.4	60.2	77.8	78.4	78.6	76.9	80.1
	중국	46.9	51.7	67.0	69.7	71.1	76.0	80.0
기술 격차 (년)	미국	0.0	0.0	0.0	0.0	0.0	0.0	0.0
	EU	1.1	0.9	1.4	1.1	1.1	0.7	0.7
	일본	1.7	1.6	1.6	1.6	1.5	1.9	2.0
	한국	6.6	5.4	4.7	4.4	4.2	3.8	3.3
	중국	9.3	7.9	6.6	5.8	5.2	3.8	3.3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 평가", 각호.

평가기관별 한국의 과학기술역량 순위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 (COSTII) ('21.12)	블룸버그 혁신 지수(BI) ('21.2)	IMD 세계경쟁력순위(WCR) ('21.6)		유형혁신 지수(EIS) ('21.6)	WIPO 세계혁신지수(GII) ('21.9)		
		종합	과학 인프라	기술 인프라	종합	과학 인프라	기술 인프라
5th in 36 OECD countries	1st in 60 countries	23rd in 64 countries	2nd	17th	1st in 10 non-EU countries	5th in 132 countries	9th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에서 재인용(P.25)

38

[새로운 도전 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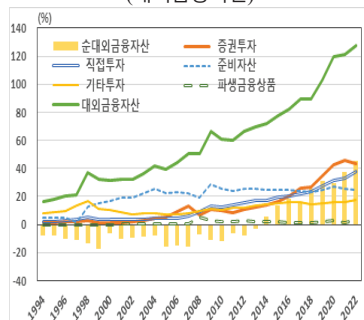
- ◆ 물가안정, 외환시장 안정, 건전한 재정, 불평등 완화 등 거시경제의 안정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케 하는 기초가 됨
 - 최근으로 올수록 대외부문의 회복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 ◆ 현시점에서 거시경제 안정의 위험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고령화 포퓰리즘 근시안 등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수지 악화 및 부채 누증
 - 미중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역 및 대외투자의 재조정 지연
 -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
 - 창의·혁신·개방·협력 중심의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이행 지연
 - 소득불평등 방치 및 사회갈등 격화
 - 기후변화 및 남북통합 등 미래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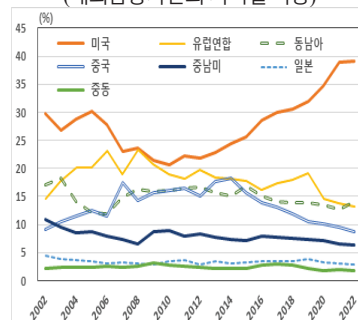
-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왔으며 2014년부터는 대외순투자국으로 전환
 -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투자 지속, 가계의 해외저축 확대,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개발금융 참여 증가 등이 예상
- ◆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자금운용 성과를 위한 각국 경제상황 모니터링, 신속 정확한 경제전망 등 연구역량 증대,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녹색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자산의 지역별 비중)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 ◆ 박준·정동재(20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도처에 만연해 있고, 일단 발생하면 장기화하는 경향
 - 2015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비교대상 37개국 가운데 6번째로 심각
 - 한국의 갈등지수가 37개국 평균 수준으로 감소하면 1인당 GDP가 6.1% 개선 예상
- ◆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과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41

42



결론

- ◆ **지난 50여년(1970~2022년)** 한국경제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기적'(miracle)** 사례로 평가받을 만큼 성공적이었음
- ◆ 그러나 **향후 30년**을 전망해 보면, 노동투입이 감소하고 자본투입도 크게 낮아지면서 **2050년경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음
 - 생산성과 추계인구를 모두 변동시킨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대 2.10~2.5%에서 2030년대 0.5~1.1%, 2040년대 -0.3~0.4%로 낮아질 전망
- ◆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본고의 제안으로, **(1) 부단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디지털·탈탄소 전환,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 **(2)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무형자산 중심의 투자구성 변화 및 적정투자 유지, 인구 감소에 전방위적 대응, 국내 지식축적시스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3)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새로운 도전 하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의 역할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4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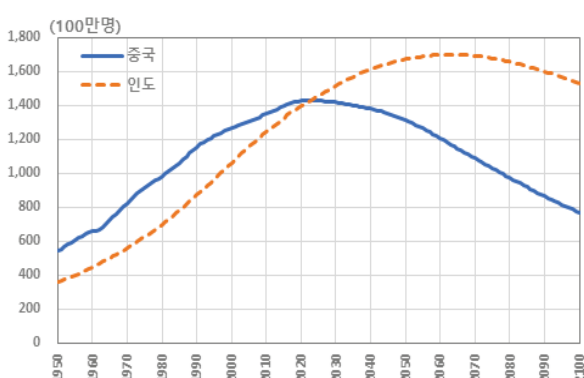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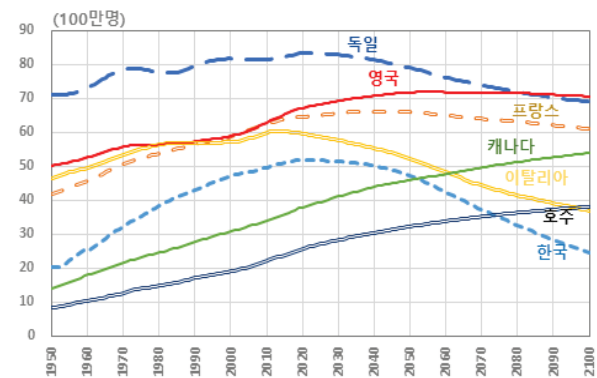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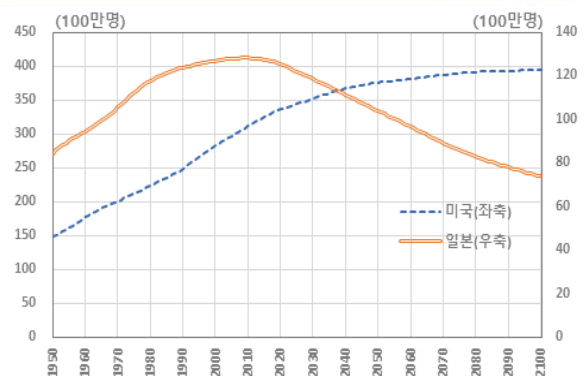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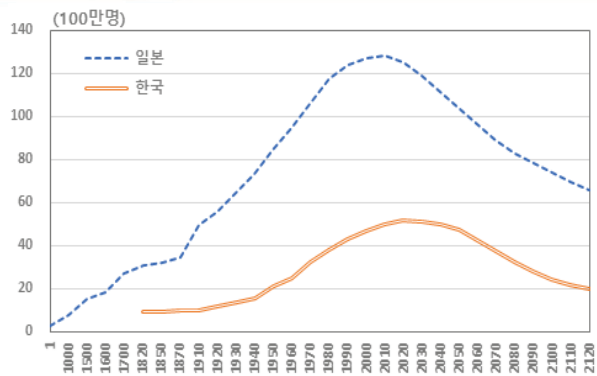
- ◆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은 인구감소 및 노동투입 감소와 완전히 독립된 변수가 아니며, **총요소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인구감소의 역전이 없이는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함에 크게 유의해야 함
 - 인구 감소 → 성장 둔화 → 투자 둔화 → 자본기여도 둔화 → 생산성 둔화 ⇒ 성장 둔화
- ◆ 따라서 실체가 불분명한 구호적인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보다 기저에 있는 인구감소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됨**
 - 물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경제로 전진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Make This Country More Innovative and Productive !

Re-boost Birth and Gather People on This Land !!



결론



45



46

[발 표 2]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2024. 2. 1.

정 중 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BOK 이슈노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성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Tel. 02-759-5485
sungwon31@bok.or.kr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Tel. 02-759-5415
jchung@bok.or.kr

2023년 12월 7일

- I.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200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다(2022년 0.78명). 이에 따라 본고는 35개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변동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한다.
- II. 35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었다.
- III. 2002~2021년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을 초래하였고, 주택마련비용 증가 역시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 IV.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이들 여건도 개선되는 경우에는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동 결과는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경제연구원 이재원 원장, 조태형 부원장, 황인도 거시경제연구실장,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 최이슬 부연구위원, 울산기획조사팀 최문정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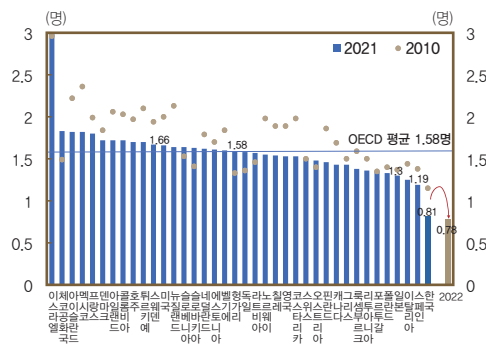


한국은행

I. 검토 배경

1. 200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1년 초저출산국(출산율 1.3명 미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후로도 출산율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처음으로 1 미만(0.977명)을 기록하였다. 이후로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여 2023년 2분기에는 0.7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그림 1], [그림 2] 참고).

[그림 1] OECD 국가 출산율 비교



5.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변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 어떤 요인이 국가별 출산율 변동에 크게 기여했는가?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들이 정책적 노력을 통해 OECD 평균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출산율의 제고 효과는?

6. 이와 같은 질문에 보고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의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 출산 비중,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는 OECD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 2002-2021년 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에는 도시 인구 집중과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 다만, 동 기간 제도·정책적 노력은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완화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저출산 요인들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보고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II 장에서는 출산율 변동요인과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III 장은 국가별 출산율 변동 요인 기여도를 살펴보고, IV 장에서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를 보인다. V 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OECD 국가별 출산율 변동요인 분석

(1) 출산율 변동요인 개관

8.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출산율 변동요인을 ① 경제적 요인 ② 사회·문화적 요인, ③ 제도·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³⁾.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개별 요인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 추정에 집중한 반면, 본 분석에서는 주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9.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써 부모의 결혼·출산·양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상황과 비용,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을 들 수 있다. 이에 각 요인의 대리변수_{proxy}로 청년층 고용률_(경제적 상황), 실질 주택가격_(비용), GDP 성장률_(거시경제)을 사용한다. [그림 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9년 기준 여타 OECD 평균보다 약 8.3%p 낮지만 2010년대 이후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은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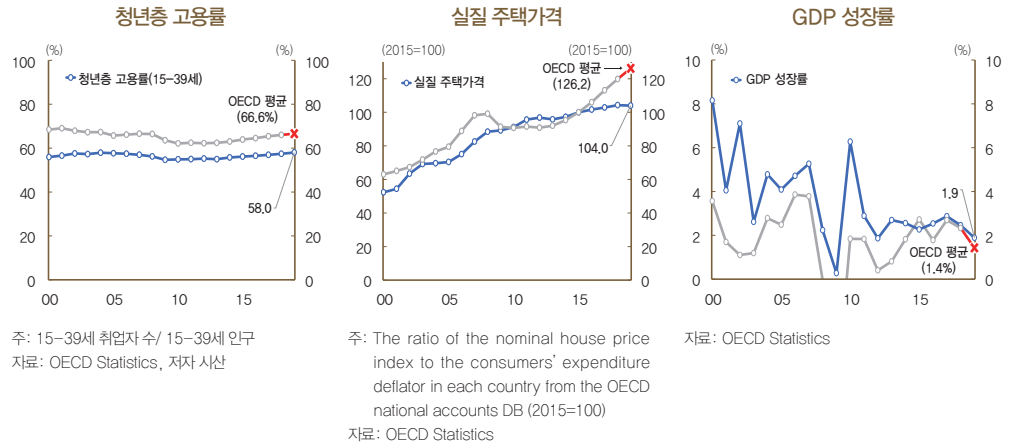
10.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구 밀집에 따른 경쟁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결혼·출산에 대한 문화를 고려한다. 각 요인의 대리변수로 도시인구집중도_(경쟁 심화),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_(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혼외 출산율_(결혼·출산 문화)을 선정하였다([그림 3] 참고).

3) 경제적 요인 관련하여 Adsera(2004), 박진백·이재희(2016), 이재희·박진백(2020), 사회·문화적 요인 관련하여 Mishra and Smyth(2010), 홍성희(2021), 류아현·김교성(2022), 정책적 요인 관련하여 김현숙·정진화(2019), 한승주·최충(2019), 최윤희·원숙연(2020) 등의 연구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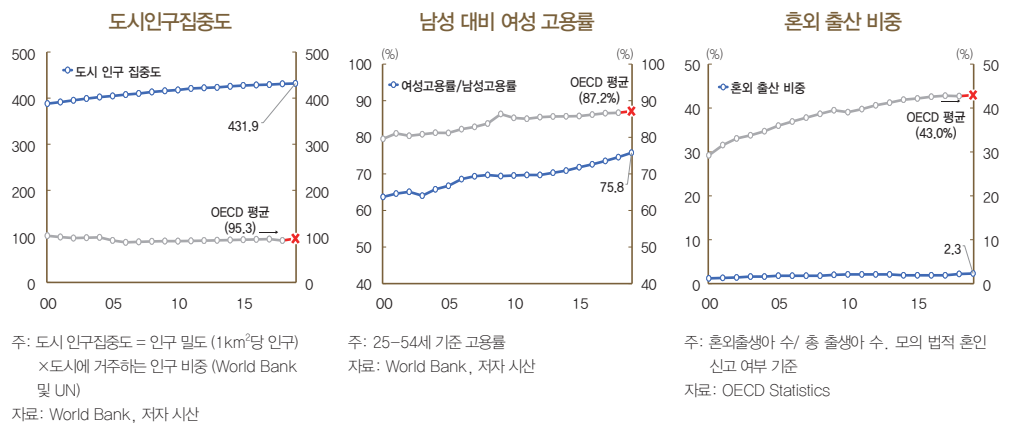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요 출산율 변동 요인들은 OECD 평균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3] 한국과 OECD 평균(한국 제외, 분석에 사용된 34개국 평균)의 추이(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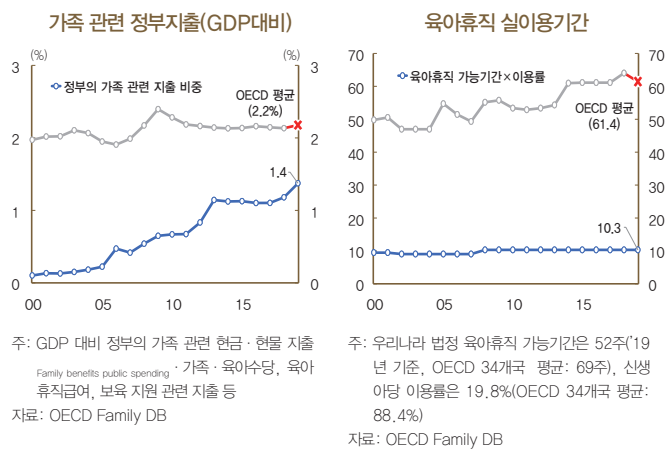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전국 인구밀도×도시 거주 인구 비중)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전국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30명으로 여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12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도시 인구 비중 역시 81%로 높기 때문이다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중은 3%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 한편, OECD의 유럽 회원국들은 비혼 동거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타 OECD 회원국들의 혼외출산율이 2019년에는 41.8%에 이른다(프랑스 61%, 아이슬란드 69.4%, 2019년 기준).

11. 셋째, 제도·정책적 요인으로써 가족 관련 정부지출과 육아휴직 실이용기간(법정가능기간×실이용률)을 살펴본다(그림 3] 참조).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 수준은 2000년 0.1%에서 2019년 약 1.4%까지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2.2%)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육아휴직 법적 가능기간은 52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인 69주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가, 이용률이 19.8%에 불과해(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는 88.4%)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

(2) 분석 자료 및 모형

12. 분석 자료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2000~2021년 연도별 자료를 활용했다⁵⁾. OECD와 World Bank 자료에서 각 변수를 국가별로 추출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3. 저출산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FE)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TFR_{i,t} = \alpha + X_{i,t-2}\Gamma + \theta_i + \tau_t + \epsilon_{i,t}$$

종속변수 $TFR_{i,t}$ 는 조사연도 t 시점에서 국가 i 의 출산율을 의미하며, $X_{i,t-2}$ 는 국가 i 의 $t-2$ 시점에서의 설명 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각 설명변수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차와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2년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각 설명변수는 표준화하여 추정 계수의 크기를 통해 각 요인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한다⁶⁾. θ_i 와 τ_t 는 각각 각 국가의 시간 불변한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별 고정효과 항과 시점별로 국가들이 겪은 공통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별 고정효과 항을 의미한다.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4)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 현상이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난다는 점(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구집중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5) OECD 총 38개국 중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이스라엘, 자료 수집에 제약이 있는 코스타리카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였다.

6) 원자료 변수를 x_{it} 라고 할 때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 $x_{it} = \frac{x_{it} - \mu}{\sigma}$ 이다(μ , σ 는 각각 x_{it} 의 평균, 표준편차).

(3) 분석 결과

14. 분석 결과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이론 및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과 GDP 성장률의 변화가 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요인) 청년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그림 1] 참고) 그 이유로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지적된다. 주로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복무에 따른 취업 지연,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시간 투자 등 때문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늦을수록 결혼·출산 시점은 미뤄지게 된다⁷⁾.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출산

·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다⁸⁾.

- (사회·문화적 요인) 도시인구집중도의 하락,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이 과열되어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⁹⁾.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가운데¹⁰⁾, 90년대 이후 혼인을 감소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¹¹⁾. 반면, 같은 시기 OECD 유럽 회원국들의 경우 비혼 동거문화가 보편화 되었으며 혼인 외 출생아에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여 혼외 출생아 비중이 매우 높다. 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은 출산율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소득개선 효과와 출산의 기회비용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

- (제도·정책적 요인) 가족 관련 정부지출과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출산·육아 비용을 분담한다면 부모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¹³⁾. 육아

7) Adsera(2004), 이재희·박진백(2020) 등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상황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8) 마르코밀렘브레인이 2022.9월 1-2년차 신혼부부 1,000명(남녀 각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혼비용(3억 3,050만원) 중 주택마련 비용이 2억 7,977만원으로 84.7%를 차지하였다(황인도 외 2023). 이와 관련하여 최윤희·원숙연(2020)과 강동익·송경호(2021)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이 혼인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박진백·이재희(2016)은 주거비용 증가 양육지출 부담을 높여 자녀출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가계교육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한다.

9) 고우림 외(2020)는 실증분석을 통해 시도 내 인구당 주거 면적, 상업 면적, 공업 면적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이유로 Kondo(2019)는 부부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에 거주할 경우 높은 임금, 높은 양육비용 등이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설명한다.

10) Myong et al.(2021)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혼외출산에 따른 사회적 낙인은 미혼 여성의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11) 이철희(2012)는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가 주로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에 의한 것임을 보인다.

12) 성격차 및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민연경·이명석(2011)과 류아현·김교성(2022)은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분석하는 반면, 임금, 사회적 지위와 경력, 인적 자원 등의 기회비용 증가로 인해 여성 취업자들이 출산을 미룰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Mishra & Smyth, 2010; 민연경 2015; 홍성희 2021). 따라서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Da Rocha et al. 2006; 최숙희·김정우 2006)과 가정 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균등한 분배(전승봉 2020; 홍성희 2021) 등 조건에 따라 여성 고용 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변화할 수 있다.

13) 양육지원을 위한 현금지원과 조세 혜택(강경희·전홍주 2013; 류아현·김교성 2022), 가족수당(정진화 외 2019), 아동수당(최영·김슬기 2017; 최윤희·원숙연 2020; 한승주·최충 2019)은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휴직 제도의 경우, 법정 휴직 기간의 단순연장뿐 아니라 유급 휴직 기간, 급여 보전 비율, 직장 내 문화 개선 등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¹⁴⁾.

15. [표 1]은 기본 분석모형의 가정 및 수식 Specification 을 수정해도 결과가 강건함을

보여준다. 국가 간 횡단면 변동만을 고려하는 개체 간 효과 모형(Between Effect: BE, 확률 효과 모형(Random Effect: RE, 연도 효과를 제외한 고정효과 모형, 그리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1년으로 가정한 모형을 분석에 적용해도 기본분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1] 국가 수준 패널 회귀 모형 추정 결과¹⁾²⁾³⁾

	[1]	[2]	[3]	[4]	[5]	[6]	[7]	[8]
종속변수 = 출산율	FE 모형 기준결과 (baseline)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 요인	정책·제도 요인	개체간 효과 모형 (BE)	확률효과 모형 (RE)	연도항 제외한 FE모형	시차를 1년으로 가정
청년층 고용률 (15-39세)	0.113*** (0.014)	0.114*** (0.013)			0.110** (0.043)	0.104*** (0.012)	0.082*** (0.014)	0.095*** (0.013)
실질 주택가격 ⁴⁾ (Real house price, OECD)	-0.042*** (0.007)	-0.045*** (0.007)			0.009 (0.063)	-0.040*** (0.007)	-0.045*** (0.006)	-0.024*** (0.007)
GDP 성장률	0.009 (0.006)	0.004 (0.006)			0.159* (0.078)	0.005 (0.006)	-0.002 (0.005)	0.007 (0.005)
도시인구집중도 (인구밀도×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0.228*** (0.064)		-0.147** (0.069)		-0.059* (0.032)	-0.075*** (0.024)	-0.219*** (0.070)	-0.182** (0.059)
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 (25-54세 기준)	-0.023 (0.018)		-0.020 (0.019)		-0.177*** (0.042)	-0.075*** (0.015)	-0.044** (0.020)	-0.033** (0.017)
혼외 출산 비중 (혼외 출생아/출생아, %)	0.104*** (0.024)		0.053** (0.025)		0.141*** (0.036)	0.097*** (0.018)	0.082*** (0.026)	0.077*** (0.022)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지원 관련 공공지출)	0.058*** (0.014)			0.054** (0.022)	0.074* (0.041)	0.045*** (0.013)	0.052*** (0.015)	0.069*** (0.012)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신생아 1명당이용률)	0.051** (0.026)			0.054*** (0.014)	-0.039 (0.029)	-0.005 (0.018)	0.009 (0.028)	0.104*** (0.024)
상수항	1.536*** (0.034)	1.510*** (0.023)	1.592*** (0.024)	1.632*** (0.023)	1.630*** (0.030)	1.530*** (0.039)	1.631*** (0.027)	1.560*** (0.023)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No	Yes	No	Yes
관측치 수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42
R ²	0.383	0.335	0.242	0.286	0.683	0.491	0.164	0.407

주: 1) () 내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Hausman 검정 결과, 확률효과(RE)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FE) 모형을 선호

3) 패널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에 관한 단위근 검정 결과, 출산율 계열은 비정상성을 보이지 않으나, FE 모형의 잔차항 시계열은 정상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자료를 OECD DB상의 주택가격 대신, 국민은행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대체하고 동 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계수의 부호, 유의성,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자료: OECD Statistics, World Bank DataBank,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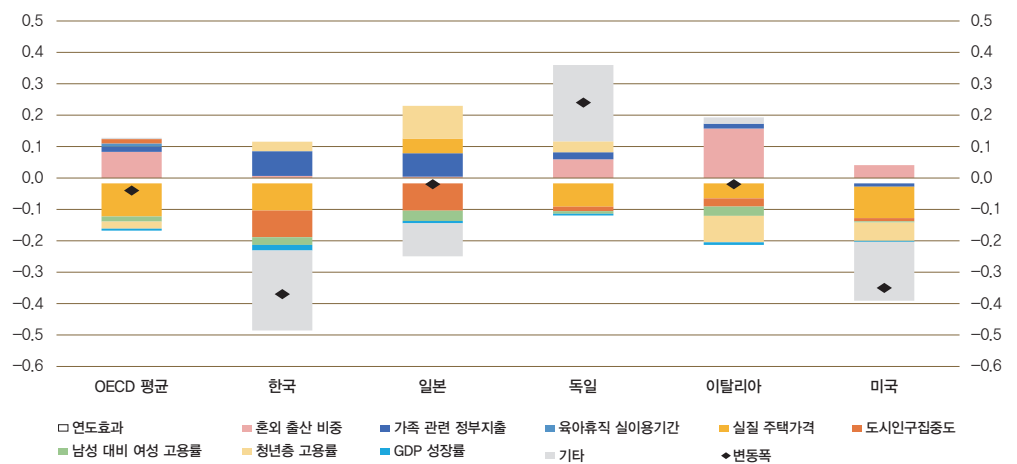
14) 선행연구는 육아휴직기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김현숙·정진화 2019; 정진화 외, 2019; 최윤희·원숙연, 2020)

Ⅲ. 국가별 출산율 변동폭 기여도 분석

16.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기간(2002~2021년) 동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폭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OECD 회원국 전체로 보면 실질 주택가격과 혼외 출산 비중이 중요한 출산율 변동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한편, 변동요인 중에서 연도 효과(연도더미변수)는 개별 연도에 모든 국가가 겪은 출산율 변화 요인을 나타낸다. 기타요인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그림 4] 국가별 출산율 변동폭 기여도 분석 (2002-2021년)



자료: 저자 시산

정책 · 제도 여건과 경제 · 사회 · 문화 여건이 개선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표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정책별 시나리오	출산율 변화 (2021년 대비, 명)
①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1.4%)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증가	0.055
②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이 OECD 34개국 평균(61.4주)으로 증가 (법정가능기간 52주×이용률 19.8%) (69.4주×88.4%)	0.096
③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으로 증가	0.119
④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하락 *단기변화 난망 (인구밀도 530.4×도시인구비중 81.4%) (122.6×77.7%)	0.414
⑤ 한국의 혼외출산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으로 상승 *단기변화 난망	0.159
⑥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	0.002
①-⑥이 모두 달성되는 경우	0.845
*(단기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④-⑤ 제외시)	0.272

주: 1) () 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및 OECD 수치(본 모형은 설명변수 변화시 2년 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2) 출산율 변화는 '기준모형 추정계수×(표준화된 OECD 평균 값-한국 값)'으로 산출

17.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인구집중도 상승과 실질 주택가격 상

승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 변동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집중 현상의 기여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이며 '11년~'21년 중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민보경 2022). 한편, 수도권 아파트 실질 매매가격은 10년('13년~'22년) 간 1.81배 증가하여 동 기간 여타 5개 광역시 아파트 실질 매매가격 증가폭(1.43배)을 상회한다¹⁵⁾.

18. 출산율 변동요인의 기여도는 문화 및 대륙

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의 경우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출산율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과 청년층 고용률 하락이 주요한 변동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가 출산율 감소추세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이 낮다.

IV. 정책 시나리오 분석

19.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화귀식 설명변수)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¹⁶⁾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요소(④, ⑤) 제외 시에는 0.272명만큼, 이들 요인을 모두 포함 시에는 산술적으로 최대 0.845명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를 OECD 평균수준(2.2%)으로 높이면 출산율은 0.055명 상승 가능하다.

② 육아휴직 제도의 재정비로 인해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이 OECD 평균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0.096명 상승할 수 있다.

③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평균수준(66.6%)까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12명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78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취업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¹⁷⁾. 다만,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동력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OECD DB는 전국 단위의 주택 가격 정보만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실질 매매 가격을 사산했다.

16) 단, 실질 주택가격의 경우 2015년 수준(104→100)으로 화귀한다고 가정

17) 2019년 기준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약 90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조사되었다.

④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으나, 인구가 특정 도시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할 것이다. 동 결과는 이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¹⁸⁾.

⑤ 혼외 출산 비중(2.3%)이 OECD 평균 수준(43.0%)으로 상승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출산율이 0.16명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혼외 출산 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도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을 하였다. 이러한 점이 추정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외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며(19-34세 청년의 혼외 출산 동의 비중: 2012년 29.8%, 2022년 39.6%; 통계청),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 비중이 조금씩 상승 중이다(21년 2.9%→22년 3.9%).

⑥ 2019년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OECD DB 기준 104)이 2015년 수준(100)으로 안정화된다면 출산율이 0.002명 상승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폭은 OECD DB 자료 기준으로는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¹⁹⁾.

V. 결론 및 시사점

20.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출산율 변동에 미친 주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1. 국가별 출산율 변동 폭 기여도 분석 결과는 도시인구집중도와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임을, 그러나 가족 관련 정부지출과 청년층 고용률의 개선이 추가적인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속도를 늦춤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2.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 및

18) 김종태(2021)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의 변화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0년 51대 49정도에서 2100년에는 62.7대 37.3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19)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자료를 OECD DB 상의 주택가격 대신 국민은행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재추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면(2019년 102.6 → 2015년 100으로 감소) 출산율이 약 0.001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비용의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정부지출 확대가 출산을 상승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저출산 예산을 육아 및 가족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주요 유럽국가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완화·반전된 배경으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황인도 외, 2023). 이는 기존의 법률혼 가정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 단순히 휴직 법정가능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급 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재직자들의 근로 부담을 낮출 방안에 대한 정부와 기업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3.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질 좋은 청년 일자리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인력과 자원의 유출을 막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²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임금 일자

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체계 개편 등의 노동 수요 측면의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완화 역시 청년층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황인도 외, 2023).

24.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비교 연구와 분석적 측면과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차별점을 갖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2002~2021년 중 우리나라가 경험한 출산율의 하락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기타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의 역할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별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는 측정하기 어려운 변화(이를테면 가치관)나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가령 고용의 질적 저하)가 최근 들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앞으로 밝혀지지 않은 저출산 변동요인에 관한 후속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20)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민수 외(2023) 참조

〈참고문헌〉

- 강경희 · 전홍주,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 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 9권 제 6호 197-221, 2013.
- 강동익 · 송경호,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14.
- 고우림 · 조영태 · 차영재 · 장대익,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 13권 제 2호 129-153, 2020.
- 김종태,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인구분포 비중에 대한 추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 32권 제 2호 375-390, 2021.
- 김현숙 · 정진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 16집 제 1호, 27-50, 2019.
- 류아현 · 김교성,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Vol. 112, No. 1 5-34, 2022.
- 민보경,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58, 2022.
- 민연경,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정관리연구, 제 10권 제 3호 1-32, 2015.
- 민연경 · 이명석,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3권 제 2호 103-132, 2011.
- 박진백 · 이재희,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51-69, 2016.
- 이재희 · 박진백,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15-23, 2020.
- 장영호,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제 29권, 1호, pp.99-125, 2015.
- 정민수 · 김의정 · 이현서 · 홍성주 · 이동렬,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 2023-29호, 2023.
- 전승봉, “직무긴장,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 분배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0, No. 8, 2020.
- 정진화 · 김현숙, 임지은,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Becker 및 Easterlin 가설 검증과 가족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재정학연구, 제 12권 제 4호, 2019.

- 최영 · 김슬기,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 60호, 2017.
- 최윤희 · 원숙연,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29권 제 3호, 2020.
- 한승주 · 최충,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제 12권, 제 1호, 27-55, 2019.
- 홍성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41-52, 2021.
- 황인도 · 남윤미 · 성원 · 심세리 · 염지인 · 이병주 · 이하림 · 정종우 · 조태형 · 최영준, 황설웅 · 손민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2023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Ⅲ. 중장기 심층연구, 한국은행, 2023.
- Adsera, Alicia.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2004.
- Da Rocha, Jose Maria, and Luisa Fuster. “Why are fertility rates and female employment ratios positively correlated across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7.4, 1187-1222, 2006.
- Kondo, Keisuke. “Does agglomeration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the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2000-2010.”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9.3, 677-704, 2019.
- Mishra, Vinod, and Russell Smyth.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otal fertility rates in the OECD: New evidence from panel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ing.”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62.1, 48-64, 2010.
- Myong, Sunha, JungJae Park, and Junjian Yi. “Social norms and fertilit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9.5, 2429-2466, 2021.
- Stock, J. & Watson, M.(1989) “New Indexes of Coincident and Leading Economic Indicators”, NBER Macroeconomics Annual, vol(4)
- Stock, J. & Watson, M.(1991), “A Probability Model of The Coincident Economic Indicators”, NBER Working Paper, No. 2772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3-32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 478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 표 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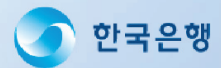
2024. 2. 1.

정 민 수
(한국은행 조사국)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2024.2.1.)>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정 민 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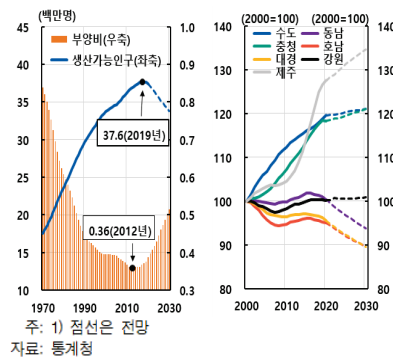
<CONTENTS>

- I. 연구배경(수도권 집중)
- II. 최근 인구이동 현황 및 청년층 이동 요인
- III. 수도권 집중의 영향
- IV.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정책 전환 필요성
- V.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성공가능성
- VI. 거점도시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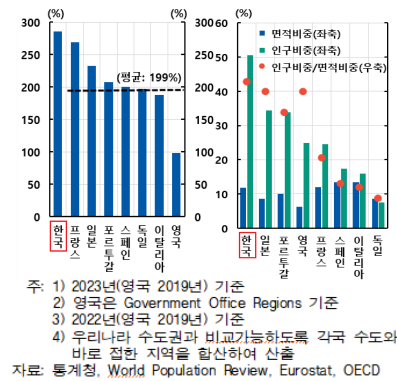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

- 인구배당 → 인구부담의 시대로 (부담의 지역별 차별화)
- 국토 11.8%의 수도권에 50.6% 인구 집중
- 인구 및 경제규모 고려해도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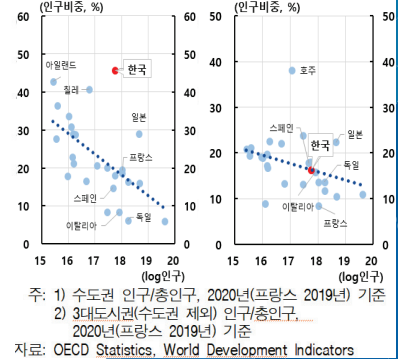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및 부양비¹⁾(좌)와 권역별 인구(우)



수도-제2도시간 인구 격차¹⁾²⁾(좌)와 수도권 밀도³⁾⁴⁾ 비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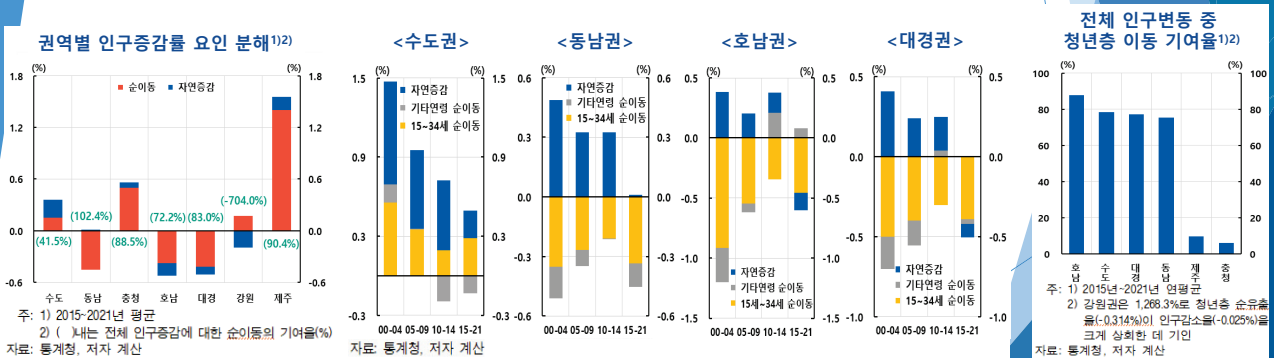
수도권¹⁾(좌) 및 2~4위도시 인구 비중²⁾(우)



최근 인구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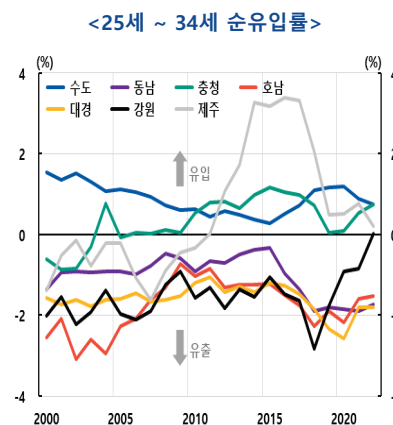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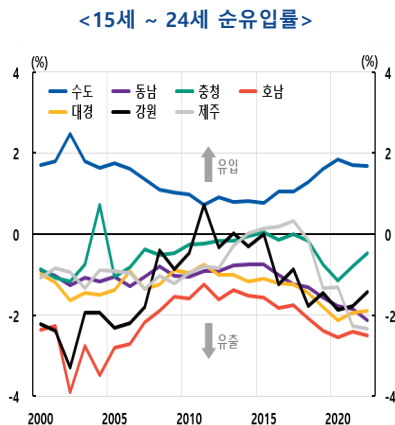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변동 요인분해

- 최근 자연증감보다 **지역간 이동(사회적 증감)** 요인 강화
- 수도권: 인구증가의 41.5%가 순유입 /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부분은 순유출
인구유출입의 대부분은 청년층(15~34세) → 전체 인구 변동에 80%내외 기여



청년층 지역간 이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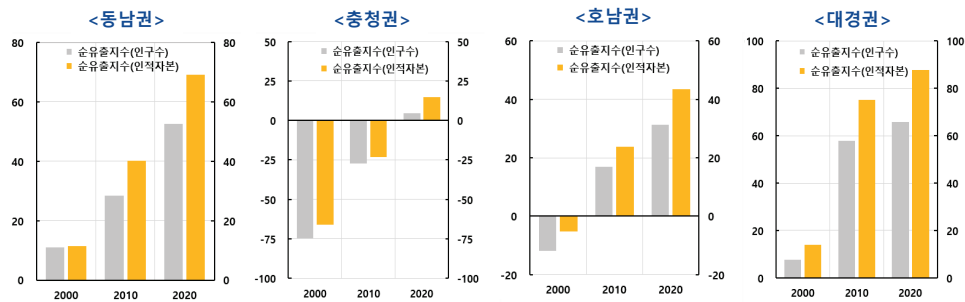
- 15~24세: 2015년 이후 수도권 순유입 증가 / 나머지 권역 순유출
- 25~34세: 수도권, 충청권 순유입 / 동남, 호남, 대경권 순유출 심화



청년층 지역간 이동 2

- 권역간 이동은 수도권으로의 이동 압도적
 - 충청, 강원 70% 상회 / 호남, 제주 60%대 / 동남, 대경 50%대
- 인적자본(교육수준) 고려시 청년층 유출정도 더 심함 (brain drain)
 - <예> 2000~20년중 동남권 → 수도권 이동: 인구기준 1.3배 / 인적자본기준 1.7배 증가

인적자본 고려 청년층 순유출지수¹⁾



주: 1) 2000년의 청년층 수도권 유출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인적자본 기준 유출지수와 유입지수의 차이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청년층 지역간 이동 요인

청년층 이동 요인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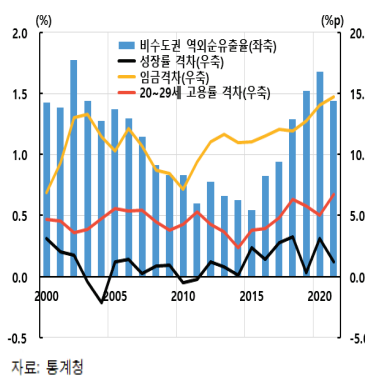
- 비수도권 청년층 권역외 이동 요인:
기대소득(임금 및 고용률), 성장률, 문화 및 의료서비스 등의 지역간 격차
- 혼잡비용(전세가격, 재산세)이 인구집중 완화하는 가격조절 메커니즘 약화

비수도권 청년층 이동요인 추정결과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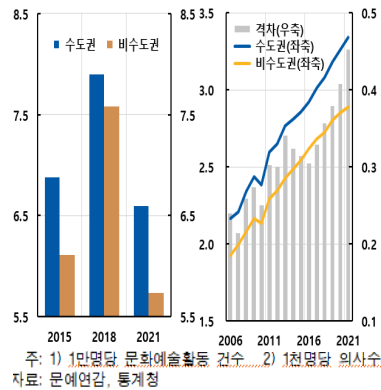
	25-34세		15-24세	
	전기기간 (06-22년)	2015년 이후	전기기간 (06-22년)	2015년 이후
임금	0.353*	0.327	0.381*	0.299
고용률	0.023**	0.030***	0.018*	0.024***
성장률	0.012***	0.007	0.015***	0.020***
대학생수	0.001	-0.035	0.083	0.072
문화서비스	0.540***	0.792***	0.478*	0.682***
의사수	0.492*	0.593*	0.389	0.439
전세가격	0.084	0.032	-0.031	-0.107
재산세	0.095	0.036	0.437***	0.490***
관측치수	3,120	1,560	3,120	1,560
R ²	0.793	0.793	0.816	0.827

주: 1) 연도 더미변수 포함
2) 거리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전기 변수
3)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비수도권 순유출율 및 수도권과의 격차



문화서비스(좌)¹⁾ 및 의료서비스(우)²⁾ 격차



청년층 이동 요인 (개인특성)

- 비수도권 대학졸업후 수도권 취업 이동한 개인 특성:
 - 기업규모 크고 임금 높음
 - 여성, 부모 소득 및 교육 수준 높으면 이동확률 상승
- # 최근 학점 및 부모 경제력 등의 영향력 약화
(자기선택성 약화 가능성)

대졸후 권역외 이동요인(인적정보)¹⁾²⁾

	수도권 이동		수도권 아닌 타권역 이동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성별(남성)	-6.7***	-7.2*	41.0***	44.1***
생년	-2.2***	1.9*	1.8***	5.2***
연령	5.2***	10.5***	-1.2	2.6
도지역	163.7***	151.2***	63.8***	58.9***
월소득				
0-300만원준거점				
300-500만원	-0.3	-8.6**	7.0*	3.6
500만원이상	18.8***	1.8	20.8***	13.4**
고졸이하준거점				
부 대졸	15.2***	13.2***	-3.4	-3.6
부 대학원졸	36.0***	41.5***	5.5	13.9
모 대졸	14.5***	14.5***	9.3**	12.7**
모 대학원졸	5.5	5.7	-1.5	0.4

대졸후 권역외 이동요인(학부정보)¹⁾²⁾

	수도권 이동		수도권 아닌 타권역 이동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인문사회(문거점)				
공학및자연	15.1***	10.8***	17.9***	17.1***
의약	31.9***	31.1***	38.4***	23.7***
예체능	7.7***	8.0***	6.0	9.9
학점(백분율상)	3.8***	1.2	4.2**	0.9
자격증 개수	-6.8***	-8.0***	-3.1**	-2.4
수업 만족도	-2.5	-3.4	5.6***	5.6**
전공도움정도	-4.8***	-6.2***	0.6	-0.5
진로상담만족도	-9.4***	-7.7***	-2.7	-5.1**

대졸후 권역외 이동요인(일자리정보)¹⁾²⁾

	수도권 이동		수도권 아닌 타권역 이동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전기기간 (10-19)	2015년 이후
매 교육수준일치도	9.1***	12.0***	-6.6***	-8.5***
청 전공 일치도	6.7***	6.6***	3.2*	4.3*
산업 제조업	-20.3***	-25.1***	9.1*	3.6
일자리 정보				
1-9명(준거점)				
10-99명	27.4***	38.2***	8.0	8.0
100-999명	41.1***	43.8***	19.7***	19.1**
1000명이상	46.1***	44.9***	65.5***	78.4***
소득 로그월소득	25.7***	24.3***	25.9***	24.7***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7.7***	-9.5***	3.2*	6.5**
이직준비	40.7***	38.2***	-2.9	-2.7
관측치수	46,667	22,640	46,667	22,640

주: 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로 추정
2) 다항선택로짓모형에 따른 권역내 잔류대비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 추정 결과
3)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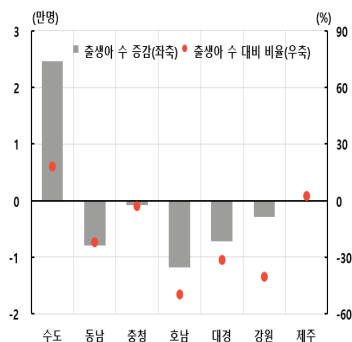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의 영향

청년층 이동과 지역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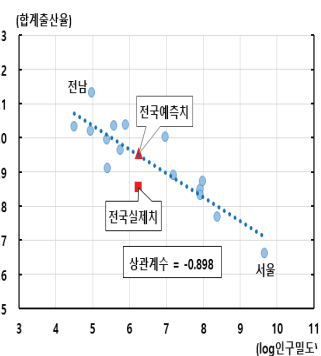
· 청년층 수도권 이동 따른 출산 손실

- 호남권은 2001~21년중 누적 청년유출로 21년 출산 1.2만명 감소(출산아수의 49.6%)
- 전국 출산 감소효과 (2021년)
 - (1) 출산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6천명) (2) 인구밀도 상승(4.8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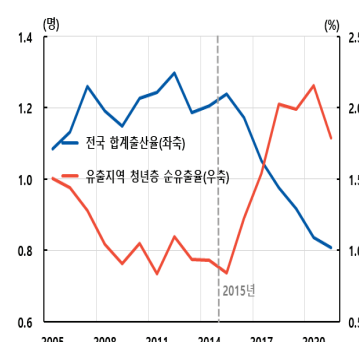
청년층 이동이 출산에 미친 영향¹⁾



시도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청년층 순유출율¹⁾과 전국 합계출산율



청년층 이동과 지역 고용

- 이동은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가?
No.. 지역간 고용지표 **양극화**를 심화

인구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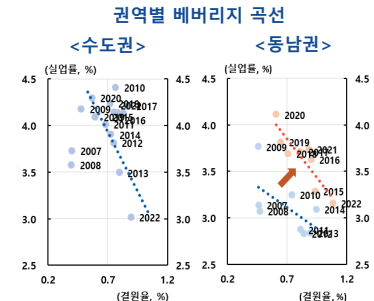
일시적 실업증가 /
이후 노동수급 매칭 개선

인구유출..

구조적 실업 해소
(일시적 실업감소) /
이후 노동공급 부족,
미스매치 ↑

	실업률		고용률	
	(1)	(2)	(3)	(4)
실업률(-1)	0.665 *** (0.100)	0.591 *** (0.119)		
고용률(-1)			0.620 *** (0.040)	0.717 *** (0.070)
청년층 순유입률	-2.653 (1.663)	-3.078 ** (1.430)	0.460 * (0.276)	0.607 * (0.361)
고용구조변화		-0.004 (0.003)		0.000 (0.000)
대출자비중		-0.221 (0.272)		0.026 (0.032)
농림어업비중		-0.463 (0.334)		0.078 (0.052)
관측치수	208	192	208	192
그룹수	16	16	16	16
A-B test AR(1)	0.000	0.001	0.006	0.005
AR(2)	0.998	0.630	0.866	0.831
Hansen test	0.664	0.660	0.891	0.347

주: 1)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5년 이후 베버리지곡선¹⁾ 변화폭²⁾³⁾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변화폭	0.189	0.675	0.284	0.466	0.509
표준오차	(0.206)	(0.113)	(0.164)	(0.178)	(0.200)
p-value	0.376	0.000**	0.107	0.022**	0.024**

주: 1) $u_t = \alpha + \beta_1 u_{t-1} + \beta_2 dummy_t + \epsilon_t$ 의 회귀식을 추정
(u_t : 실업률, u_{t-1} : 결원률, $dummy_t$: 2015년 이후 더미)

2) 더미변수의 회귀계수(β_2)

3) **, ***는 각각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청년층 이동과 지역 성장

인구 유출지역은..

- 1차효과: 생산능력 및 소비수요 감소, 인프라 투자 위축
- 2차효과: 집적 이익 축소, 인적자본 축적 둔화, 출산 감소

회귀분석(1인당소득 5년평균 성장률, FE model)

- 고학력 청년층 이동이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5년) 효과 뚜렷
- 인적자본 축적, 지식의 상호보완성 및
파급효과가 고학력자 간에 훨씬 큼
- ∴ 고학력자 이동은 기존 한사람 이상의 효과

	(1)	(2)	(3)	(4)
전체인구	-0.464 (0.324)	-1.450 ** (0.500)	-1.438 *** (0.268)	-1.242 ** (0.420)
청년층인구	-0.372 (0.274)			
청년층순이동		0.112 (0.125)		-0.064 (0.146)
청년층대졸자 순이동			0.047 ** (0.019)	0.059 * (0.033)
관측치수	64	64	63	63
R ²	0.702	0.695	0.712	0.714

주: 1)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청년층 이동과 국가경제

인구이동의 순기능

-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별 이질적 충격 흡수(Monr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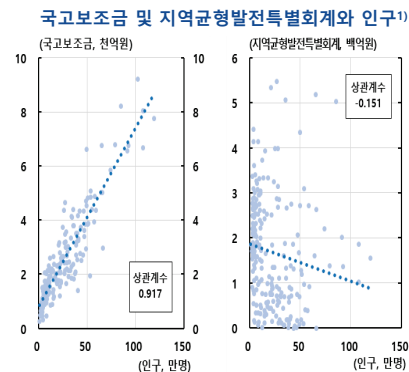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의 영향 (pros & cons)

- 경제발전 초기: 생산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성숙기: 자원배분 비효율 부각(집중도-성장 간 역U자형 관계, Henderson 2003)
- 개인은 이동이익 > 이동비용 / 수도권은 집적이익 > 혼잡비용
그러나 일방적인 이동 따른 지역 양극화는 **국가경제 안정 저해**
수도권 최적규모는 수도권 입장 > 국가전체 관점(Kim et al 2014)
- 불평등 및 기회불균등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저해(Atalay et a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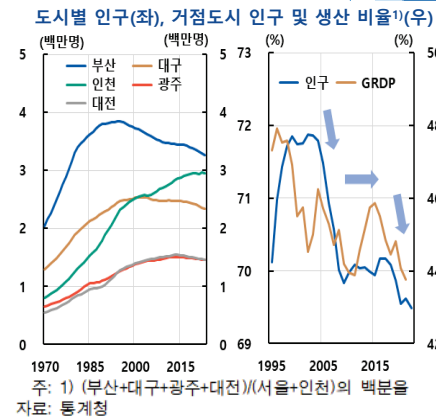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정책 전환 필요성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

-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이후 4차에 걸친 정책 추진
 -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은 주로 인구비례 배분 / 낙후지역 우선 개발
 - 나름의 지역경제 발전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비 지역 대도시 쇠퇴 지속
- ∴ 그동안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을지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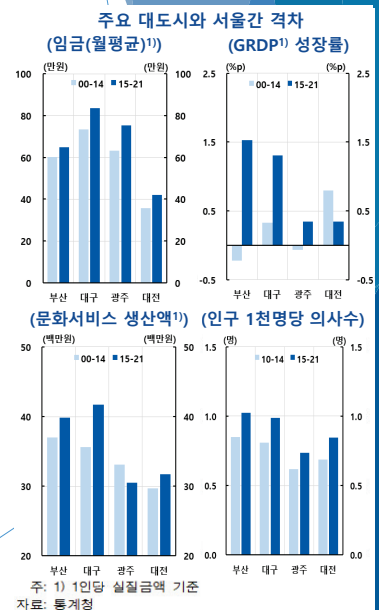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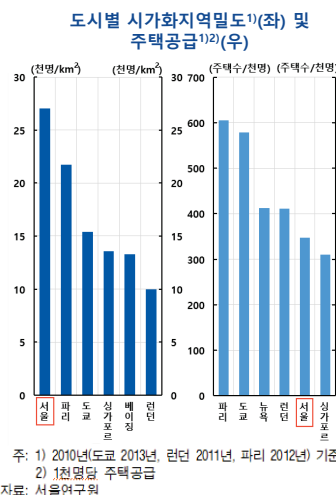


주: 1)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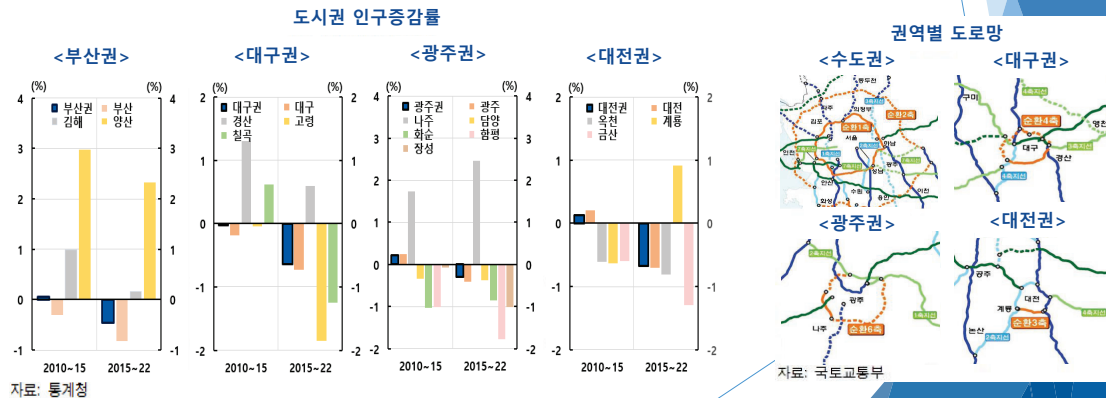
거점도시 중심으로 정책 전환 1

- 수도권 압도적 경쟁우위
 - 일극체제 하에서 청년들은 무한경쟁 감수하고 이동 선택
 - 막대한 주택 / 교육 비용 불구 치열한 경쟁 여전
- 비수도권 대도시 위상 회복 필요
 - 청년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자리 제공 위해
-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 필요



거점도시 중심으로 정책 전환 2

- 수도권 경쟁력 원천: 서울 중심으로 인구, 산업 집중 따른 집적과 규모의 경제
- 비수도권도 집중 불가피 → 글로벌 경쟁력 갖춘 권역별 중심지 필요
 -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의 실현가능성 고려
 - 재정부담 시대 정책 효율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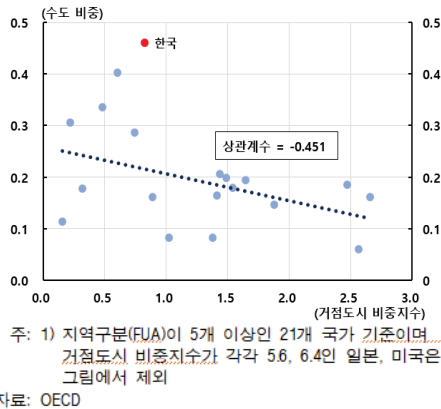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성공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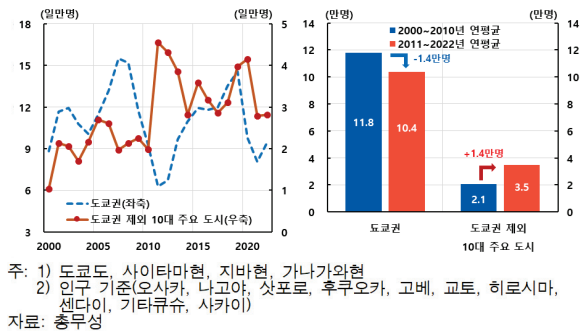
거점도시 성장의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1

- OECD 국가별 수도 - 거점도시 자료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일부 거점도시로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팽창 견제
(2~4위 도시 합산 비중지수 및 집중도 높으면 수도 비중 낮아짐)

거점도시 비중지수¹⁾와 수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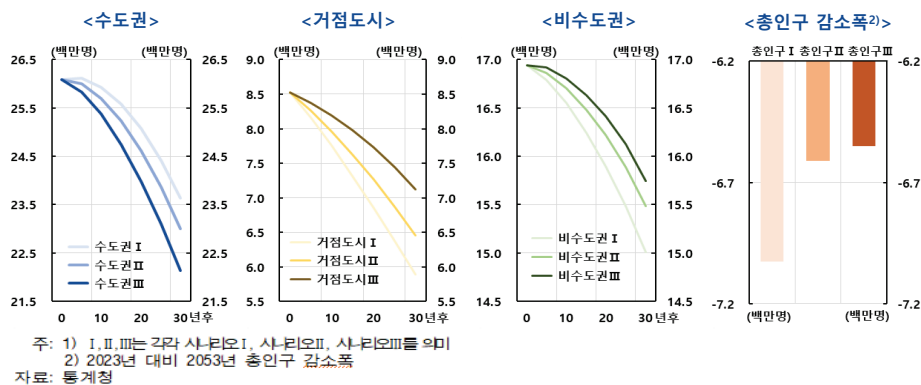
도쿄권¹⁾ 및 도쿄권 제외 10대 주요 도시²⁾ 순인구유입



거점도시 성장의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2

- 청년층의 거점도시 → 수도권 유출 줄고 도지역 → 거점도시 유입은 늘어나는 시나리오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 집중 억제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 : 시나리오 I 53.1% vs 시나리오 III 49.2%
+ 전국 인구 약 50만명 증가)

시나리오별 인구 시뮬레이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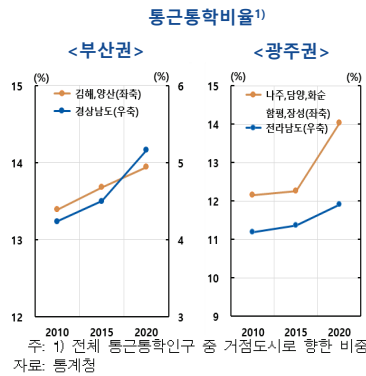
거점도시 발전가능성 평가 1

- 최근 권역내 타지역에서 거점도시로 이동 개선
 - 특히 거점도시로 **청년층 유입 및 통근통학 증가**
- 거점도시로 이동 사유로 직업, 교육, 주거환경 비중 상승
 - 제조업체 근처, 집값 낮은 교외로 이동 과거 패턴에 구조적 변화 조짐

청년층 순이동¹⁾ (명)

	연도	전국	권역내	수도권	권역외 비수도권
부산	10-14	-12,805	-4,142	-7,545	-1,118
	15-19	-9,301	-1,116	-8,201	16
	20-22	-6,020	4,557	-10,964	387
대구	10-14	-9,660	-1,727	-5,973	-1,960
	15-19	-8,329	-10	-7,149	-1,171
	20-22	-9,103	1,371	-9,674	-800
광주	10-14	-3,181	1,784	-3,921	-1,044
	15-19	-5,215	1,378	-5,260	-1,333
	20-22	-3,831	3,239	-6,093	-977
대전	10-14	-756	-246	-2,746	2,235
	15-19	-4,214	-3,841	-3,726	3,353
	20-22	-734	-40	-4,921	4,228

주: 1) (+)는 유입, (-)는 유출을 의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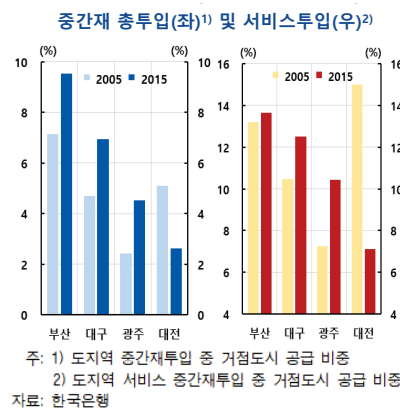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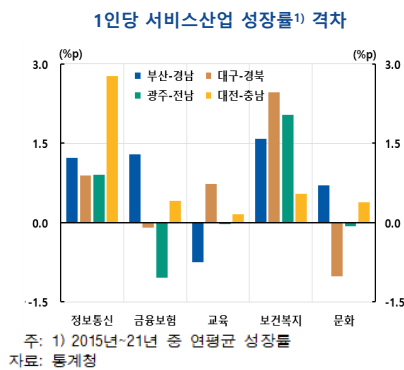
도지역 → 거점도시 전입사유¹⁾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계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직업	33.8 (+4.6)	28.9 (+4.3)	26.3 (+4.3)	34.8 (+3.9)
가족	25.6 (-2.8)	31.7 (-2.0)	33.8 (-3.4)	28.0 (-2.5)
주택	20.1 (-7.6)	19.4 (-8.7)	19.8 (-3.3)	16.2 (-5.9)
교육	10.5 (+3.0)	8.0 (+3.0)	8.1 (+1.6)	10.8 (+3.3)
주거환경	3.8 (+1.9)	4.5 (+2.3)	4.0 (+2.0)	3.8 (+1.8)
자연환경	0.7 (+0.0)	0.7 (-0.0)	0.6 (+0.0)	0.6 (+0.1)
기타	5.4 (+0.9)	6.7 (+1.1)	7.4 (-1.4)	5.8 (-0.6)

주: 1) 2018-22년 평균값이며 ()내는 2013-17년 평균값 대비 증감폭
자료: 통계청

거점도시 발전가능성 평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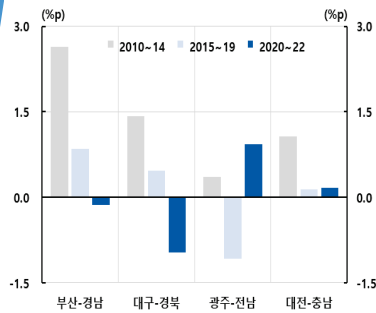
- 이동 패턴 변화는 거점도시의 **산업중심지, 일자리공급 기능 회복** 시사
 - 소비 중심지에서 정보, 지식 융합 및 창조하는 생산거점 변모중
- 거점도시 서비스산업 성장 및 생산성 개선으로
 - 인접지역으로 서비스중간재 공급 역할도 강화



거점도시 발전가능성 평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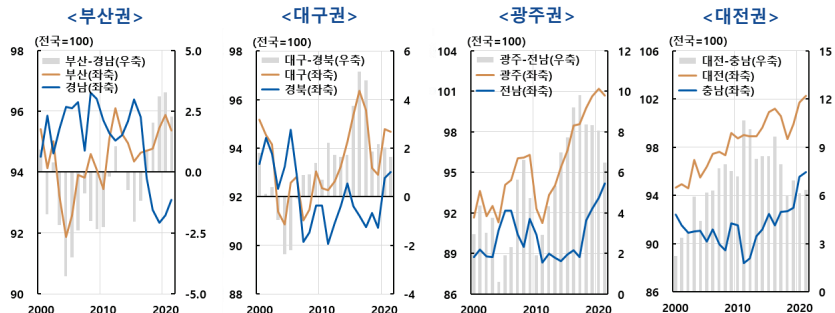
- 거점도시 서비스 경쟁력 및 역할 강화가 고용 및 소득에도 반영
 - 청년실업률 거점도시 - 도지역 간 격차 반전
 - 1인당 개인소득 격차도 확대 추세

청년¹⁾실업률 격차



주: 1) 15세~29세
자료: 통계청

1인당 개인소득 격차



자료: 통계청

거점도시 발전방향
(분산을 위한 집중)

거점도시 발전방향 1

대형 인프라의 거점도시 집중

-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 거점도시에 집중하여 권역 배후수요 및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모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내 이동 촉진

- 인프라 거점도시 집중시 주변지역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교통, 공간계획, 지역개발 등은 행정구역 통합관리 효과 가장 큰 분야 (광역기구 실질적 권한 있으면 교통, 환경, 나아가 생산성 제고 가능)

거점도시 발전방향 2

권역별 특화

- 모든 거점도시가 서울과 같은 수준 달성은 비현실적 – 선택과 집중 필요
→ 권역별 자율성과 정부의 조율기능 조화로 중복투자 방지
- 권역별 대내외 여건 고려하여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민첩 대응 중요

도심내 지식산업 집적

- 지식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지리적 집중이 유효한 전략 (지식파급과 정보공유 위한 대면소통 필요성 여전)
→ 도심내 지식산업 클러스터 집적하고 클러스터 간 거리도 축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MINS@BOK.OR.KR

